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안 연구

-일본 안보법 개정에 따른 자위대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에 대한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HANSUNG
UNIVERSITY

2016년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송 석 봉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회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안 연구

－ 일본 안보법 개정에 따른 자위대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에 대한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OK Military Strategy in Accordance to the
Augmentation of Japanese Self-Defense Forces : Centered around
the military strategy on the role and expansion on the range of
activity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regarding the reformation
on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law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송 석 봉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구형회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안 연구

—일본 안보법 개정에 따른 자위대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에 대한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OK Military Strategy in Accordance to the
Augmentation of Japanese Self-Defense Forces : Centered around
the military strategy on the role and expansion on the range of
activity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regarding the reformation
on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law

위 논문을 안보전략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일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송 석 봉

송석봉의 안보전략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일



HANSUNG
UNIVERSITY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국의 군사전략에 대한 방안 연구

－ 일본 안보법 개정에 따른 자위대 임무 및 활동범위 확대에 대한
군사전략을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전략학과

군사전략전공

송 석 봉

최근 일본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안보법 재·개정이 참의원 본회의 통과하면서 일본 자위대의 독자적인 방위력 증강 및 활동범위 확대를 일본 방위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1951년 미·일 안보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단지 미국에 의해 자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소극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했으며 1970년대 후반에는 소련의 위협 증가에 따라 일본은 기존의 미·일 동맹에서 미비했던 군사적 운용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78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다. 이후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관심이 안보분야에서 경제분야로 전환되면서 양국의 갈등이 잠시 나타나다가 지식인과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동맹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면서 미·일 동맹은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의 등장 이후 미국 주도－일본 지원이라는 수세적이고 억제적인 기존의 일본 방위정책기조와는 다른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기조를 취하면서 자위대의 군사적 증강 및 작전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의 방위백서와 2014년 방위계획대강에 부대편제 조정 및 무기체계 증강을 통해 군사력 증강과 자위대 작전범위 확대를 위한 방향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과 대응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응책을 우선 강구하고, 일본 자위대 공군력과 해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사전략의 구성요소 중 군사자원 측면에서 경제 강국인 일본과 상응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건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점이 많기에 일본의 해·공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전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둘째, 미래지향적 한·미 동맹을 통해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앞으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동맹을 점진하여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고, 한·미 관계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과 군사력 증강에 견제하고 저지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주변 열강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불안정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으로 일본이 패망한지도 70년이 흘렀다. 1945년 일본은 헌법에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결코 본토방위를 위한 최소한의 군대가 아니다. ‘작지만 강한 군대’라고 불릴 정도의 장비, 무기체계 등이 최신화 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방위정책 재·개정을 통해 군사력 증강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 행동’이라는 내용의 안보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됨으로서 자위대 작전범위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이에 준하는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일본의 군사증강은 급속하게 진행 될 것이다. 한반도는 지리적·역사적·민족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 및 활동영역 확대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응하고 억제하기 위한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 강화, 한·미 이해관계 확대 및 신뢰를 바탕으로 연합 방위태세 유지, 한반도 주변 열강과 다자안보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함과 동시에 한반도 주변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향을 강구하여야 한다.

【주요어】 집단적 자위권, 연합방위태세, 다자안보협력체계, 군사전략의 3요소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절 연구의 목적	1
제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 2 장. 군사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제 1절 군사전략의 개념 및 사상	3
제 2절 현대적 군사전략의 개념 확대	8
제 3절 군사전략의 요소와 역할	12
제 3 장.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16
제 1절 일본의 방위정책	16
제 2절 일본의 군사전략	24
제 3절 자위대 편성 및 현황	30
제 4절 일본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평가와 전망	35
제 4 장. 대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	37
제 1절 동북아시아 안보환경 변화 인식	37
제 2절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 고찰	43
제 3절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 방향	45
제 5 장. 결 론	50
참고문헌	55
ABSTRACT	57

표 목 차

<표 3-1>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의 핵심내용	22
<표 3-2> 중기 방위력정비 5개년 계획기간(2014~2018년) 도입 장비	26
<표 3-3> 新방위대강의 육상자위대 현황 및 전망	31
<표 3-4> 新방위대강의 해상자위대 현황 및 전망	33
<표 3-5> 新방위대강의 항공자위대 현황 및 전망	34
<표 4-1> 동북아 주변 4국의 군사력 군대 조직의 특성	38

그 림 목 차

<그림 2-1> 전략의 체계	4
<그림 2-2> 군사전략 구성요소와 상관관계	12
<그림 3-1> 일본의 방위비 추세	2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21세기 세계는 통합과 분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안보적 측면에서, 1990년 초 이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동서대립이라는 양극 구도 하에서 세계안보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되었기에 국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안보정책 영역은 크게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초강대국인 미국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른바 단다극체제(單多極體制)하에서 미국은 전 세계의 안보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내 안보에 대한 지역 국가의 자율적인 안보영역은 확대되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다. 안보적인 차원에서 냉전종식에 따른 미국의 역내 영향력은 예전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¹⁾

지난 4월 27일 미국에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일본주변의 가이드라인이 미일동맹 행동반경으로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일본정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11년 동안 매년 국방백서에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하여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통상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 의미는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해 있어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반면에 역사적으로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 결코 가까워 질수 없는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지역은 일본을 포함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라는 국제적 안보환경 속에서 격동의 동북아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동북아의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하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와 주변국의 국방정책, 미래전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을 고려하여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승철 역. (2004)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pp. 5-6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일본 자위대 임무와 활동범위 확대가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일본의 방위정책 및 군사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연구하게 되었다.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최근 일본의 안보법 및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통한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대일 군사전략의 발전방향을 구상하는데 있다.

미래 “대일 군사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현대적 군사전략의 개념을 통한 군사전략의 3요소를 분석하였고, 일본의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을 통한 자위대의 변천사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이 동북아 및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기술적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군사평론, 군사교범 및 교리, 이론서적 등 문헌을 통한 현대의 군사전략이라는 이론적 분야를 고찰하였다. 일본 자위대에 관한 내용은 주로 일본 방위백서, 국방관련 서적과 논문을 참조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총 5개의 장으로, 제 1장에서는 일본의 안보법 및 미·일 방위협력 개정안을 통해 동북아 안보정세를 배경으로 연구목적을 제시하였고, 제 2장은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로 현대적 군사전략에 따른 구성요소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 3장은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에 대한 실태와 내용으로 일본의 대동북아 전략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제 4장은 일본의 방위정책을 중심으로 자위대의 변천과정과 군사력 수준, 향후 한반도 및 동북아에 미칠 군사적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 5장은 대일관계를 통한 한반도의 군사전략 발전방향으로 미래 일본 자위대 활동범위 확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국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 6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Ⅱ. 군사전략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군사전략의 개념 및 사상

1. 군사전략 개념

고대 그리스에서는 군사전략을 “장군의 술(術)”이라 했다. 군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합의의 근사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에 전략이란 용어는 광범위하고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군사전략의 개념적 접근에 대해 일반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즉 정의, 군사전략을 이루는 기본요소의 기술과 이들 요소들이 상호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의 분석인 것이다. 미 합참에 의해 승인된 정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다. “무력의 사용 또는 무력의 위협으로 국가정책의 목표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군대를 운용하는 기술 및 과학이다.” 이 개념을 등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²⁾

전략은 지향하는 목표와 행동방안에 대한 방법,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 즉 수단이 종합된 것이며, 일반적인 개념은 어떤 유형의 전략(사용되는 국력요소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 형성의 기초가 된다. 군사전략과 국가전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국가전략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목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평화 및 전쟁기간 동안 군대를 포함한 경제적, 심리적, 정치적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기술과 과학이다.”³⁾

한국의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Staff)에서는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의 일부로서 전·평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건설 및 운용하는 술(術)과 과학으로, 군사전략 수준에서 관장하는 분야는 주로 전쟁이며, 이를 수행하는 기구는 국가통수기구 및 군사지휘기구, 한미연합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이다.”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군사전략은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수단을 효과적으로 준

2) 국방대학교. (1984) 『군사전략 I』 pp.83-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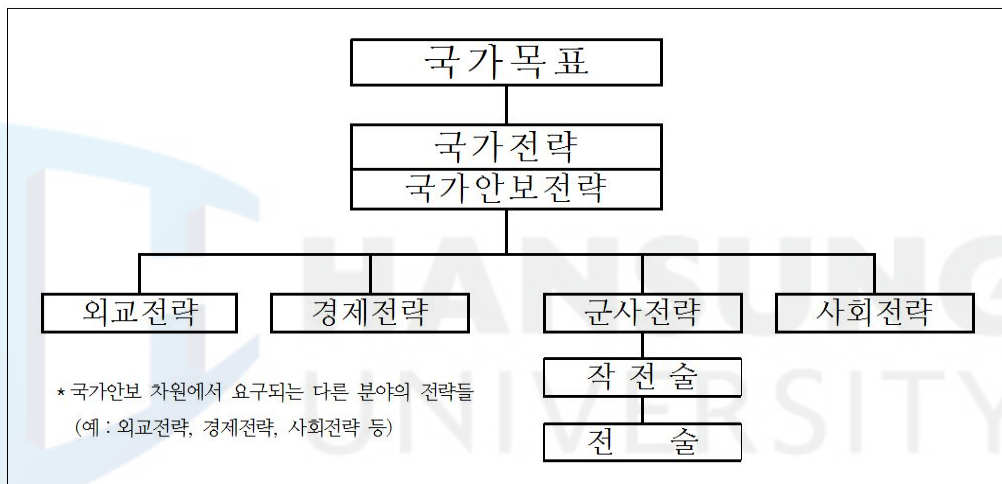
3) 최병갑 외. (1988) 『군사전략대강(I)』 에서 부분 발췌한 것임.

비하고 계획하고 운용하는 방책”⁴⁾이라고 군 교육기관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군사전략은 국가전략 전체의 일부분이다. 국가전략의 군사적 부분을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군사전략은 국가전략을 뒷받침해야 하며, 국가정책에 부응해야 한다. 국가정책은 국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가 채택한 광범위한 행동방안 또는 지침으로 정의된다. 바꾸어 말하면 국가정책은 군사전략의 능력 및 제한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전략의 체계에서 군사전략의 위치를 도식화 하면 <그림 2-1> 과 같다.

<그림 2-1> 전략의 체계



* 출처 :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2005 : p.99.)

전략=목적+방법+수단이라는 공식은 전략의 일반적 개념으로써 군사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다. 목적은 군사목표를 구현할 수 있으며, 방법은 군대를 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군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방법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방안은 군사전략개념(military strategy concept)으로 표현된다. 수단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자원(물자, 금전, 인력 등)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군사전략은 군사목표와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의 3요소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4) 국방대학교. (2006) 『안보관계용어집』 p.96.

군사전략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작전전략(operational strategy)이고 또 하나는 군사력개발전략(force developmental)이다. 현 군사능력에 입각한 전략이 작전전략, 즉 단기간의 행동을 위한 특정 계획수립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이런 수준의 전략을 고등전술(higher tactics) 또는 대전술(grand tactics), 작전술(operational art)이라고도 한다. 장기 전략은 미래의 위협 및 목표의 예측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현 군사력 수준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군사전략의 군사목표 및 군사전략개념은 자원의 소요량을 설정하지만, 반면에 자원의 사용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현재의 군사전략은 일반적으로 현존하거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협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 목표 달성과 국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건설하고 운용하는 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군사전략의 사상

“전쟁은 인간의 삶 속에서 무조건 주어진 불변의 요인이다. 인간은 결코 전쟁을 영원히 제거할 수도 없고, 또 전쟁으로 인해 온 인류가 제거될 수도 없게 되어 있다.”⁵⁾ 따라서 인류는 있는 그대로의 전쟁을 이해할 수밖에 없고, 냉철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을 효과적으로 대비, 억제, 수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전략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사용하고 있으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전략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주요 전략가들의 전략사상과 이론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전쟁은 정치의 연장에 불과하다”라는 전쟁 본질론으로 유명한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의 전략사상으로 전쟁이라는 현상 그 자체는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를 따르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라 정의하고 그것의 실천적인 의미는 ‘정책의 단순한 연속’이라고 규정하였다. 이로써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그 자체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의 목적은 정치적 요구에

5) 순주영 편저. (해군사관학교, 1996) 『강좌 전략론 III: 전쟁론』 p.159.

부응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이 클라우제비츠를 평가할 때 가장 자주 언급되고, 또한 가장 오해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클라우제비츠는 정치적 요구에 절대적으로 부응하는 전쟁,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는 전쟁을 설명하였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대비의 방법으로서 절대전쟁의 개념을 소개하였으나, 일부 군인들이나 군사이론가들이 단편적인 인용을 통하여 클라우제비츠를 절대전쟁의 주창자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있다.⁶⁾

대표적인 클라우제비츠의 개념으로 “전쟁은 확대된 양자 결투에 불과하다. 전쟁을 형성하는 무수한 양자 결투들을 하나의 통일체로 생각한다면 두 명의 결투자를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양자는 공히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폭력으로 상대방을 강요할 것이다. 이들의 당면 목적은 적을 전복시키고 이를 통해서 어떠한 추가적인 저항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있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의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 적을 강요하는 폭력행위이다.” 이처럼 인류가 공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쟁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사전에 억제하고 예방함으로서 국가의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안보전략에 부응하기 위해서 군사전략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⁷⁾

또 클라우제비츠는 방어는 공격보다 강력한 형태라고 강조하였다. “방어의 목적은 무엇인가?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은 쟁취하는 것 보다 쉽다. 따라서 똑같은 수단이 유지되고 있다면 방어는 공격보다 쉽다. 그런데 지키거나 보존하는 것이 좀 더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경과된 모든 시간이 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방자는 씨를 뿌리지 않고도 수확할 수 있다. 그릇된 관점, 두려움, 태만에서 연유된 공격의 중단은 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방어는 지킨다는 소극적인 목적을, 공격은 정복한다는 적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가 공격보다 쉽다는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되어 있다. 정복하는 것은 전쟁수단을 증대시켜야 하지만 지키는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표현하면, 전쟁수행에 있어서 방어형태는 본질적으로 공격형태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방어는 공격에 비해 전쟁수행의 강력한 형태이지만 공격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이

6) 합동참모대학 교재. (2004) “합동군사전략과 박경현 편저”, 『현대군사전략개론』 pp.25-111.

7) 류제승 역. (1998) 『전쟁론』 p.33.

치이다. 적극적 목적을 세울 만큼 충분히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한다면 방어를 중지해야 한다. 방어를 통해 승리하면 전투력 보존이 보다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을 방어로 시작하여 공격으로 끝내는 것은 원칙적인 진행이다.” 지금도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국가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방어를 실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전쟁술의 저자 프랑스의 조미니의 전략 사상이다.⁸⁾

조미니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전략사상가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의 기준으로 보면 전술가 또는 작전술가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는 전략의 개념이 확장되었지만, 과거에는 전장에서 최고지휘관이 군사력을 운용하는 방향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조미니는 그 당시의 기준에 충실하여 전장에서 부대를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조미니가 기술한 내용들은 그 당시에는 매우 유용하였을 것이나, 현대의 시각에서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세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니는 그 당시까지 연구되어 오던 전승의 방식들을 총 정리하여 제시함에 따라 현대적인 군사학이 정립되는 기초를 수립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때까지 유럽을 지배하던 기하학적이면서 사전 결정론적인 내용들을 이론과 접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저술한 내용의 대부분은 현시대와는 맞지 않지만, 그가 강조한 주요 개념들은 상당한 기간 동안 군대에 적용되었고 현재도 작전술 및 전술 교리에 용해되어 있는 내용이 많다.

마지막으로 기계화 전투를 주창해 유명해진 영국의 군사전략가로서 리델하트는 손자의 사상을 서구적으로 전환시켰다고 할 정도로 사상적 맥을 같이 한 ‘간접 접근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는 기습의 중요성과 위력을 전사(戰史)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동시에 리델하트는 ‘대전략’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종래까지 군사작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던 전략의 범위를 확대하고, 군사작전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모든 노력들에게 일관성을 부여하는 개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8) 류제승 역. 전게서, pp. 258-259. 인용

제2절 현대적 군사전략의 개념 확대

1. 현대적 전략개념

전략의 개념은 전쟁의 근대적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확대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더욱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개념의 확장은 전쟁양상의 확대에 따른 것, 목적과 활동영역의 확대, 수단과 목적의 동시적인 확대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전쟁양상의 확대에 따른 개념의 확장은 전쟁의 양상이 모든 힘을 사용하는 형태로 확대됨으로써 전략의 개념이 전장행위의 전략(The Strategy of warfare)에서 전쟁전반의 전략(the strategy of war)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전략의 개념이 순수한 무력사용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이데올로기, 종교, 과학기술적인 것을 포함한 전반적 정책수단의 사용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는 전략의 개념이 전투의 전략에서 전쟁의 전략으로, 전·평시 모두 유효하며, 전장지대 뿐만 아니라 전선 후방에서도 전쟁 상황이 존재하여 단순한 무장폭력 뿐만 아니라 테러나 게릴라전과 같은 전반적인 무력행위 까지도 포함하는 등 그 내용이 변형되었음을 의미한다. 리델하트는 전략을 “전시에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의 분배와 적용 기술”이라고 정의하여 전략에 대한 현대적인 개념으로 확대시킨 분기점으로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앙드레 보프르는 리델하트의 개념을 아직도 군사력을 주 대상으로 한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략이 모든 상황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외교와 같은 비 군사적인 수단에 의한 강제력까지 포함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전략의 목적과 활동영역의 확대는 전략의 개념이 전쟁뿐만 아니라 평시에 있어서의 군사 활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드워드 얼(Edward M. Earle)은 “전략은 현재 또는 잠재적인 적에 대해 중요한 이익을 효과적인 증진과 확보를 위하여 어느 한 국가 또는 국가연합의 모든 자원을 통제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전쟁은 평시에 방지되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쟁중심적인 얼과는 달리, 전략을 평시의 정치적 목적달성

에 더 중점을 두는 전략사상가들이 있다. 오스굿은 “현대의 군사전략은 적어도 공개적 또는 비공개적, 묵시적인 수단에 의해 대외정책을 가장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무력 강제능력을 사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획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군사력의 평시 정치적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핵무기와 같이 현대무기의 위력이 커지면서 대량살상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을 창안해내는 것이 중요해짐으로써 리델하트가 말한 바와 같은 전략의 순수한 군사적 정의는 사실상 사라졌다.

셋째, 전략의 수단과 목적이 동시 확대되었다는 것은 전략의 목적이 국가안보를 포함한 국가의 전체적인 목적을 지향하게 되었고, 그런 만큼 그 수단도 정치, 경제, 군사, 이념, 그 밖의 잠재력 총체 등을 모두 사용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안보는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 목표를 다룬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전략을 미국은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라고 표현하고, 영국은 대전략(Grate Strategy), 프랑스는 총력전략(Total Strategy)이라고 표현한다. 미국의 합참은 국가전략을 “전평시를 막론하고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군사력과 함께 한 국가의 정치, 경제, 심리적인 힘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술(術)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영국의 리델하트는 대전략의 역할을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 또는 연합국가의 모든 자원을 조정하고 지향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프랑스의 앙드레 보프르는 총력전략을 “총력전 수행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각 전략목표를 선정하고 각 해당 분야인 군사, 정치, 경제, 외교적인 전 분야가 연관되어 만들어져야 하는 방식을 규정 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전략의 개념은 과거의 단순한 전쟁 중심에서 벗어나 종적, 횡적으로 많이 확대되었다. 그러기에 현재의 전략에 접근하고 자 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요인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줄리안 라이더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전략은 이론적인 측면과 실전적인 측면에서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이론적 측면은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칙이나 원칙적 지식을 말하거나 아니면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전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원칙이나 기술의 체계를 말한다. 실전적 측면은 전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계획과

전투, 즉 계획수립과 전투수행의 두 가지 활동을 말한다.

둘째, 전략은 종래에는 야전군사령관이 전투에서 경험한 전투방법론이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수준의 전투술(戰鬪術)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사회, 이념, 기술 등 제 분야를 망라하는 전체로서 전쟁수행 문제를 포괄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전략은 전쟁과 관련된 원래의 의미로 보는 것과 전쟁과 평화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 새롭게 보는 것으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전략은 전쟁수행의 이론과 실제로 간주할 것인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넷째, 전략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내문제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이론과 실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는 특히 내전 시 외세의 개입이 관계될 경우에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⁹⁾

2. 현대적 군사전략의 전망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전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군사전략가들의 역할은 점점 복잡해졌다. 현대의 군사력은 일반적으로 더 거대하고, 강력하며, 그 구조가 훨씬 더 복잡하다. 그리고 그들의 기능 중 많은 부분이 더욱 특수화되고 있다. 특히 기회나 제한사항 등이 상이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현대의 군사력은 3차원(지상, 해상, 공중), 더 나아가 4차원(우주)에서 운용된다. 위의 요인들 및 기타요인들이 전략수립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군사지도자들은 점증하는 전쟁의 복잡성과 효율적인 전략개념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을 개발해 왔다. 이러한 것들 중 가장 명백하고 널리 알려진 기법들로는 군사 참모조직을 확대하거나, 참모부 내의 여러 가지 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를 사용하는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예로는 정밀하고, 신속하며, 컴퓨터에 기초한 정량분석 기술에 의존하는 정교한 참모조직을 갖고 있는 미국의 체계일 것이다.

9) 윤형호. (1994) 『전략론: 이론과 실제』, 서울: 한원, pp.10-19. 인용

또 현대의 전략가들은 숨 막힐 정도의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발전도 따라가야 한다. 가용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적의 기술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점차 복잡해졌다. 게다가 현대의 군사력은 첨단과학 무기체계에 너무 의존하게 되었기에 광범위한 연구개발은 현대 강대국 전략가들의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다.

반면에 기술이 군사문제에 대해 언제나 적절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는 못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현명한 전략가라면 우수한 기술의 장점 및 한계를 명확히 알고 적절히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현대의 전략가들이 다루어야 할 영역은 크게 확대되었다. 그들의 시야는 전장이라는 좁은 한계를 벗어나 인간이 시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해야 한다.

그들이 다루어야 하는 분쟁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확대되었는데, 위로 가공할 핵전쟁이며 아래로는 게릴라, 반군 및 테러리스트들이 하는 음지에서의 전쟁이다.

현대 군사전략은 전통적으로 ‘무력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하는 전통적인 중점을 간직한 채, ‘어떻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새로운 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의 전쟁양상으로 등장한 핵전은, 핵무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건 아니면 제한적으로 사용되건 간에, 이를 억제해야 하는 형태의 전쟁이지 이겨야 하는 전쟁은 아니다. 전면적 혹은 제한적인 핵전을 치른 후의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을 예측하기가 결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전을 대상으로 한 전략은 핵무기를 어떻게 잘 사용하여 이를 승리로 마감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핵전쟁 자체를 억제하느냐에 그 핵심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핵뿐만 아니라 현대과학기술의 발달로 무기체계의 정밀도와 파괴력이 과거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었다.

전면전이 줄어들었다고 군사전략의 중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상호 위협에 대해 군사력을 증가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견제하는 등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전략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군사전략은 주로 평시에 운용되며, 전쟁의 수행보다는 전쟁의 억제를 통한 평화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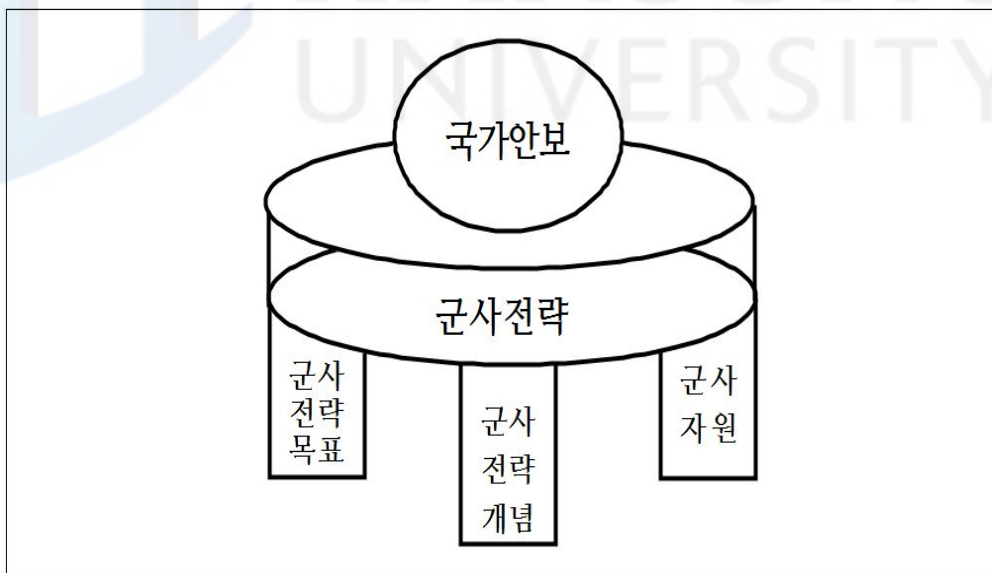
에서 전통적 전략이 ‘폭력의 능숙한 사용(the skillful use of violence)’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면 현대 전략은 폭력사용의 위협을 통하거나 혹은 폭력사용의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방어능력의 구비와 실전배치를 현실화하는 ‘폭력의 능숙한 불사용(the skillful non-use of violence)’을 핵심으로 지니게 되었다.¹⁰⁾

제3절 군사전략의 요소와 역할

앞에서 연구한 군사전략의 개념과 사상을 통해 현대적 군사전략의 개념과 이해를 확대하였다.

군사전략의 개념분야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략의 3요소는 목표, 방법, 수단이며 군사전략의 3요소는 <그림 2-2> 와 같이 군사전략 목표, 군사전략 개념, 군사지원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2> 군사전략 구성요소와 상관관계



* 출처 : 박휘락, 『전쟁, 전략, 군사입문』 (2005 : p.121.)

10) Y. Harkab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Jerusalem : Israel Program for Scinetic Translation, 1966), p.1

위 그림과 같이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는 군사전략이라는 세 개의 지주로 지지되는 도형 위에 있다. 군사전략은 군사전략목표, 군사전략개념, 군사자원이라는 세 개의 지주들 간에 상호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군사자원이 전략개념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임무 부여 간 군사능력과 일치하지 못했을 경우 곤란에 봉착하게 된다.

1. 군사전략 목표의 역할

군사전략은 군사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군사목표에서 시작한다. 이것은 군사능력 및 자원을 투입해야 할 특정 임무 혹은 과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침략의 억제·병참선의 보호·조국의 방위·실지의 회복 및 적의 분쇄 등이다. 이 목표는 성질상 군사적인 것이다. ‘클라우제비츠’, ‘레닌’, ‘모택동’ 모두가 전쟁 및 정치의 종합적 관계를 강조하였지만, 군대는 능력 범위 내에 적절한 임무를 주어야 한다.

‘리델하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전략에서 목표라는 주제를 논의 함에는 정치 및 군사목표의 구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르나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전쟁 그 자체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목표는 정치목표의 수단인 것이다. 그러므로 군사목표는 정치목표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군사전략의 의미에서 본질적인 목표는 국가정책목표이다. 때때로 정책지침은 식별하기 힘들며, 있다 해도 정확하지 않고 불분명하다. 국가정책은 국력의 기본요소(정치, 사회, 심리, 기술 및 군사)와 관련되어 있다. 흥미 있는 것은 군사정책은 여러 분야에 상호 중복되며 상호 모순적일 경우도 있다.

순수한 정치적 또는 군사적 목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지도자는 성질상 경제적 또는 정치적인 국가목표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의 군사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즉 군 지휘관은 국가정책의 목표에서 가능한 군사목표를 도출할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그 군사전략 목표는 국가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하여야 한다.

2. 군사전략개념의 역할

전략적 상황의 예측결과로서 채택된 군사행동방안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군사전략의 개념은 포괄적인 선택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방위, 억제, 무력시위, 집단안보 및 안보협력 등이다. 이것은 군사력이 일방적으로 또는 동맹국과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 개의 방법이다. 전략적 개념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나 때로는 관심을 두지 않거나 묵인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미국의 월남전을 보면 월맹측은 베트남 공산화를 위해 최초에는 군사원조와 게릴라 요원을 직접 남하하였고, 그 후 월맹정규군을 남파시키면서 전쟁을 확산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대응전략을 구상하지 못하였다. 미국은 반게릴라전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 추구하였다고 하지만, 월남 내에서 게릴라작전은 전략적이라기보다 전술적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다.

군사전략개념의 정립에 있어서 적과 전장환경에 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는 어느 요소보다 중요하다. 군사전략개념은 쌍방간 두뇌싸움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정보가 불충분하여 가정사항을 설정하게 되면 그 만큼 개념의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지나치게 적을 의식하게 되면 수세적인 대응을 위주로 한 개념이 성립되기 때문에 독창적인 개념으로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개념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강점은 극대화하고 적의 약점을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군사전략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최선의 군사전략은 수 개의 대안을 설정한 다음, 각 대안별로 주어진 군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Suitability),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지(Feasibility), 비용 대 효과 분석이나 법적이거나 정서적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Acceptability) 등의 기준을 통하여 비교 및 평가하고, 선택한다. 비교를 통하여 특정 대안을 선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위험(Risk)을 평가하고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군사전략개념을 조정하거나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정 상황이나 특정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 군사전략개념이 선택되거나 변화되어서는 안 되며, 그 국가의 전반적이면서 장기적인 상황에 부합되도록 군사전략개념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¹¹⁾

3. 군사자원의 역할

군사자원은 군사전략 등식의 수단부분에 해당되며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즉 군사전략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전략개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전략 및 전술핵부대, 방어 및 공격부대, 현역 및 예비군 부대, 인력·전시물자 및 무기체계를 포함한다. 물질적 부분(병력, 무기체계)외에 한·미 연합전력, 국가 동원시스템 등 비물질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모든 가용요소를 군사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맹국 및 우방국의 역할과 기여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총병력비율은 전투,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으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발된 전략의 유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할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분석해 보면 남군의 지휘관은 북군의 지휘관들에 비해 보다 융통성이 있고 상상력이 풍부한 전략개념을 전개하였지만, 북군에 패배하였다. 그 중요한 이유는 북군이 작전전개에 있어서 비록 남군보다 부족하다 하더라도 전쟁을 주도하는 지속력, 즉 효과적인 전쟁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 있어서는 북군이 남군보다 성공적으로 작전을 진행한 점에 있다. 즉, 북군은 기존의 유리한 교통망을 이용하여 전장에서 필요한 병력 및 군수자원을 적시에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전쟁이 소모전 양상을 띠게 되면서 보다 풍부한 군수지원을 할 수 있었던 북군이 우월한 작전을 전개하였던 남군을 패배시킴으로 전략개념보다 전략수단이 더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전통을 남겼다.¹²⁾

미국의 남북전쟁 교훈처럼 군사전략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방안으로써 군사전략 개념도 이에 적합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군사자원의 질(質)과 양(量)도 중요하지만 한정적인 군사자원을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때 전략의 수단으로서 그 가치(價値)를 극대화 할 수 있다.

11) 박휘락, 전계서, pp.122-123

12) Michale Howard, 국방대학원 역. (1988) 『전략개론』, pp.9-24.

Ⅲ. 일본의 방위정책과 군사전략

제1절 일본의 방위정책

1. 일본 방위정책의 형성

1945년 7월 26일 미·영·중국 간의 합의된 포츠담 선언에 대해 일본은 어떠한 조건도 붙지 못하고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패전을 맞이했다. 이로써 일본 영토는 1895년 청일전쟁 종결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었고 일본에 연합국총사령부가 설치됨으로써 미국의 점령통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¹³⁾

1945년 일본정부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헌법초안을 작성하였고,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시 일본천황을 전범으로 처리한다는 국제적 압력에 의해 전쟁 포기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키면서 제2장 9조의 내용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회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영구히 포기한다.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명기되어 있다.¹⁴⁾

이러한 평화협정 제정 이후 1947년 미·소의 냉전시대가 격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미·소 관계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미군 철군시 소련의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일본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군이 일본내 주둔 및 일본 군사기지, 시설에 대한 유지를 위한 특별협정체결을 요청하였다.

대일 강화문제담당 국무부 고문인 존 포스터 텔레스는 1950년 6월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과의 조기 강화조약 체결과 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트루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951년 1월 조기 강화원칙과 강화내용 및 일정수준의 일본의 재군비(5만 명 수준의 보안대)에 관한 비밀 합의와 함께 미군에 의한 일본 내 기지 사용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일 안전보장조약의 내용에 관해 합의하였다.¹⁵⁾ 합의과정에서 수많은 논쟁

13) 박영준. (2008) 『제3의 일본』, 서울: 한울, pp.211-212.

14) 다나카 아키히코, 이원덕 역. (2003)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서울: 중심, p.135.

15) 상계서, pp.212-215.

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이 미군의 주둔을 요청하고 이를 미국이 수용하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것과 미국 군대는 극동에 대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와 함께 일본에 대한 대규모의 내란 및 소란을 제압하고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합의하게 되었다. 1951년 9월 4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이 체결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일본에는 26만 명의 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주일 미군 4개 사단 대부분이 한국전쟁에 동원됨에 따라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 좌익의 폭동, 파업 등에 대비하고 미국인 보호를 위해 일본 경찰력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1950년 맥아더 사령부는 일본의 평화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예비대 7만 5천여 명 창설과 8천여 명의 해상보안청 요원의 증원을 일본정부에 지시하였다.¹⁶⁾

이후 6.25전쟁이 1953년 7월까지 지속됨에 따라 미군은 일본이 재군비를 갖추고 자주적으로 미군 지상부대를 대신하여 일본의 방위를 책임질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일본이 동의함으로써 일본의 재무장이 시작되었다. 11만 명으로 시작한 경찰예비대는 편제를 군대식으로 갖추게 되고, 1952년 8월 1일에 보안청이 정식 발족하였다. 이후 미국의 대일 군사원조 제공과 함께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력 증강요구를 일본이 받아들여 방위청 설치법안과 자위대 법안을 마련하여 의회에서 격심한 찬반양론을 거쳐 1954년 6월 관련법안을 공포함으로써 7월 1일 방위청이 설치되고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 발족되었다. 또한 자위대의 임무를 직접침략 및 간접침략에 대하여 일본을 방위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재 자위대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경찰예비대 발족 후 일본의 방위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여(貸與) 또는 공여(供與)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미국은 당시 경제원조가 중심이었던 대외원조를 군사지원으로 변경하여 원조 수혜국의 안보와 연결시킴으로써 미국의회의 승인을 용이하게 얻기 위해 1951년 10월에 상호안전보장법을 제정하였다. 미국은 상호안전보장법이 일본에 적용되어 일본의 방위력이 증강되면 주일미군의 감축을 통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16) 다나카 아키히코, 이원덕 역, 전게서, p.71.

판단하였다. 이에 양국이 군사병력 18만 명 창설안에 합의함으로써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 병력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이 본격화됨으로써 일본의 방위정책도 형성되었다.

일본의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은 1957년 결정되어, 1958년부터 1976년까지 시행되었으며, 이때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를 통해 일본정부는 미·일동맹에 기초한 최소한도의 방위력 증강을 목표로 하는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을 세웠다. 제1차 방위력 정비계획 당시 국제정세는 소련이 일본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었기에 소련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대항형의 소요방위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¹⁷⁾

2. 일본 방위정책의 변천사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단계는 냉전기 시대의 방위정책 단계이며, 2단계는 탈냉전기의 방위정책, 마지막으로 3단계는 21세기의 방위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친 냉전기 시대의 방위정책은 기반적 방위력을 바탕으로 일본 본토의 방위에 역점을 두고 방위력을 증강하는 것이었다. 제2차 방위력 정비계획(1962~1966)을 통해 해상·항공자위대는 소련의 공중공격 및 잠수함 공격에 대비하여 근대적 장비를 보강하였고, 육상자위대는 국내 치안활동에 중점으로 보강되었다. 제3차 방위력 정비계획(1967~1971)은 ‘주변해역 방위능력 및 중요지역 방공능력 강화와 각종기동력의 증강을 중시하는 방침’을 세우고, 베트남 전쟁이후 변화된 미국의 전략변화에 따라 재래식 전력에 의한 국지전에 대비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였다. 제4차 방위력 정비계획(1972~1976)은 육상·해상·항공자위대 모두 신예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석유파동과 미중·중일수교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 목표달성에 실패하였다.

17) 성인모. (2012) 『군사평론 제419호』, “일본 방위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 영향요인 분석”, pp.120-130.

이후 일본은 방위력 정비계획 대신 1976년 10월 방위정책의 종합적인 구상을 담은 ‘방위계획대강’을 채택하였다.¹⁸⁾ ‘방위계획대강’의 핵심내용은 소규모의 제한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체 방어하고 이에 따르는 최소한의 기반적방위력(基盤的防衛力)을 보유하고, 대규모의 외부공격에는 미국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일본을 방어한다는 것이다.¹⁹⁾

일본은 3차례에 걸친 방위력 정비계획을 통하여 냉전시기가 종식되기 전까지 기반적방위력(基盤的防衛力)을 바탕으로 본토방위에 중점된 방위정책은 지속되었다.

1980년대 미국은 소련과 신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일본에게 방위부담 증가를 요구하였다. 당시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증가하게 되자 GNP 대비 2% 상당의 안전보장세를 일본이 지불해야 한다는 결의가 미 의회에 제출되는 등 미국의 방위분담 압력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방위계획대강’에 따라 양질의 방위력을 갖춘 자위대 건설을 목표로 한 ‘56중기업무건적’(1983~1986)을 발표하고, 1983년에는 1,000해리의 ‘Sea Lane’, ‘불침항모론’, ‘해협봉쇄론’ 등을 방위정책으로 표명하였다.²⁰⁾ 이는 일본이 전수방위를 넘어 지역에서 해상방위 역할을 증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서 주변지역의 유사시에 개입할 수 있는 군사능력 확보를 위해 ‘59중기업무건적’(1986~1990, 제1차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59중기업무건적’은 일본이 지역방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방위용을 넘어 공격용으로 전환 가능한 장비와 무기를 갖추고, 영해와 해상 방공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1980년대 일본의 방위정책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시작된 신냉전체제로 인해 많은 변화를 보였다. 미국은 일본에게 동맹으로서 역할 분담과 방위비분담을 통해 소련을 저지하였고, 일본은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력에 맞는 군사력 유지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일본은 전수방위를 넘어서서 지역에서 해상방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방위정책을 추구하였다.

18) 다나카 아키히코, 이원덕 역, 전게서, p.254.

19) 박영준, (2008) 『미·일·중·러의 군사전략』, 한울, p.126.

20) 박영준, 전게서, pp.220-222.

1990년 발생한 걸프전으로 인해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인적자원과 재정지원을 포함한 책임분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일본 자민당은 1991년 1월에 자위대 항공기를 걸프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 1992년 6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허용하는 ‘UN평화유지활동군(PKO) 협력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하에 일본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제2차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 제2차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목표는 최근 국제정세 변화를 감안한 방위력의 정비노력의 추구였다. 이 계획은 보유 장비의 수준을 첨단화함으로써 해상교통로 방위를 포함한 지역역할의 확대를 충족시키고자 하였고, 또한 PKO활동 등을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세계 차원의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자 하였다.

1995년 11월 일본정부는 ‘신방위계획대강’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냉전 시기 이후 일본 방위정책을 새롭게 정의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신방위계획대강’은 1976년의 방위계획대강에서 표명된 두 가지 기본 원칙인 기반적방위력 개념과 미·일동맹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세 가지 변혁을 추구하였다. 첫째, 1976년 당시에는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한적이고 소규모의 공격에 대해서만 일본 자위대가 대처하고 대규모 공격에 대해서는 미군과 협력하여 일본 영토를 방위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5년에 구체화된 ‘신방위계획대강’은 일본에 대한 직접공격을 주로 자위대가 대처하고 미군이 보완하는 형태로 작전개념이 전환하였다. 둘째, 자위대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였다. 셋째, 자위대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합운용을 강화하였다. 자위대를 양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첨단화·경량화 함으로써 군사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1997년 4월 13일 미·일 양국은 냉전 이후 약화된 미·일동맹의 필요성을 재확인 하는 ‘미·일 신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을 통해 소련의 위협으로 상징해 왔던 미·일동맹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에 대한 동맹으로 재정의 되었다.²¹⁾

이는 소련의 위협으로 한정되었던 동맹관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동맹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1) 성인모, 전계논문, p.129.

2004년 12월 일본은 ‘방위계획대강 2004’를 발표하였다. ‘방위계획대강 2004’는 9·11테러 사태 이후 일본 자민당 정권의 21세기의 안보정세 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위계획대강 2004’는 9.11테러 사태 이후 국제 정세에서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확산, 국제 테러리즘의 확대 등과 같은 새로운 위협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지적하고 있다.²²⁾

‘방위계획대강 2004’는 국제 정세의 흐름에 맞추어 일본 방위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3가지 사항을 제기하였다. 첫째, 일본 스스로 국제사회 및 동맹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의 증대와 새롭게 대두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일본의 방위력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둘째, 미·일 동맹에서 공동의 전략인식을 도모하고, 억제력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정부개발원조 활용, 중동에서 동아시아에 이르는 해역의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UN의 개혁에 관한 적극 참가, 아태 지역의 다국 간 안전보장 노력 강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제시하였다.²³⁾

2010년 12월 17일 일본은 ‘방위계획대강 2010’을 발표하였다. ‘방위계획대강 2010’는 새롭게 정권을 잡은 민주당의 성향과 안보정세 판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방위계획대강 2010’은 일본이 처해 있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제기하였다. 첫째, 일본 자신의 노력으로 일본 스스로를 방위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의 증대이다. 둘째, 미·일 동맹을 바탕으로 하는 동맹국과의 협력 추진이다. 셋째, 국제사회에 있어 다층적 안보협력의 방안의 추진을 제시하였다.²⁴⁾ ‘방위계획대강 2010’은 지금까지 추진했던 기반적방위력 개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동적방위력 개념을 제시하였다. 동적방위력 개념이란 여러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다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의 방위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9월 19일 일본 안전보장관련 법안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재·개정 되었다. 이번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 재·개정은 2014년

22) 박영준, (2010) “일본 「방위계획대강 2010」 과 한·일 안보협력 방향”, 춘계 세미나 자료 p.23.

23) 상계서, p.24.

24) 상계서, p.35.

7월 일본의 헌법해석 변경,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통해 구체화된 집단적 자위권을 제도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양국이 공통으로 대처해야 할 안보전략 목표를 설정하여 미군과 일본 자위대 간의 역할 및 임무, 각 상황별 상호 협력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문서이다.

<표 3-1>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의 핵심내용

구 분	핵심내용	
방위협력과 지침의 목적	양국간 안전보장 및 방위협력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미·일간 역할/임무, 협력/조정문제에 관해 일반적인 틀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	
기본 전제 및 사고	-	
동맹 내부 조정	동맹조정 메커니즘, 운용면의 조정, 공동계획의 작성	
일본의 평화 및 안전의 빈틈없는 확보	평시 협력 조치	정보수집/경계감시, 정찰, 방공 및 미사일방어, 해양안전보장, 자산(asset) 방호, 훈련 및 연습, 후방지원, 시설 사용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대처	비전투원 대피 활동, 해양안전보장, 피난민 대응 관련 조치, 수색/구조, 시설/구역 경호, 후방지원, 시설 사용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발생시 대처행동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작전 구상, 작전 지원 활동 등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 사태발생시 대처행동	자산 방호, 수색/구조, 해상작전, BMD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작전, 후방지원
일본의 대규모 재해에 대한 대처 관련 협력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국제적인 활동 관련 협력	평화유지활동, 해양안전보장, 파트너의 능력 구축 지원, 비전투원 대피 활동, 정보수집/경계감시 및 정찰, 후방지원 등
	3개국 및 다국간 협력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우주에 관한 협력, 사이버 공간에 관한 협력	
미·일 공동 대처	방위장비/기술 협력, 정보협력/정보보전, 교육/연구교류	

* 출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년 동아시아 전략평가』, (2015 : p.123.)

2015년에 발표된 미·일 신(新)방위협력지침은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8개 분야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일 양국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핵심 안보과제로 ‘중국’을 설정하고 있는 점이다.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의 본문에서, 소위 말하는 ‘중국위협론’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직접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1997년의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그랬듯이 미·일 新방위협력지침 역시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동대처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에는 ‘그레이존 사태’에 대한 미·일 양국의 공동대처 방침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국의 공세적인 군사활동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에는 중국 어민 등의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 열도 상륙 상황에 대한 미군과 자위대의 공동 대처 방침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도서 방어’를 위한 미·일 양국군의 공동대응 계획도 궁극적으로는 중국위협을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미·일 新방위협력지침 책정을 계기로 미·일동맹이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각 중 사태에 대해 빈틈없는 대응이 가능하게 된 점이다. 新방위협력지침에서 미·일 양국은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빈틈없고 실효적인 범정부 차원의 동맹 조정을 가능하기 위해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미·일 동맹의 운용면의 조정, 공동 작전계획의 작성능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평시의 경계/감시 활동부터 도서(島嶼) 점령 등의 그레이존 사태,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미국 등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유사사태 까지, 각 중 사태에 대한 빈틈없고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셋째, 미·일 동맹의 지리적 작전 반경이 일본 주변지역에서 전 세계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1997년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한반도 유사시, 즉 일본 주변사태 발생 시의 미·일간의 역할 및 임무 분담 등에 관한 공동 작전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기존의 ‘주변사태’를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협에 대한 대처’, 즉 일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영향 사태’로 새로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자위대의 후방지원 임무에 관한 지리적인 제약을 없애고 일본 주변 이외의 지역에서도 미국을 비롯해 타국 군에 대한 후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한반도, 대만해협의 상황뿐

만 아니라 동중국해, 인도양, 중동까지의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의 긴급 상황에 대한 미·일동맹의 공동대처를 판단하고 있다.

넷째,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영역에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사실이다.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관여 가능성과 관련 있는 부분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대처’와 ‘일본 이외의 국가에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처’ 부분이다.

이번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기 이전, 전자는 주변사태에 대한 대처, 후자는 미·일 방위협력지침에서 새로 도입된 개념이다.²⁵⁾

이처럼 일본의 방위정책은 시대를 변화하면서 주변 위협에 대한 안보영역을 확대하고 직접적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 영향까지 위협을 선정하여 방위정책을 확대시키고 있다. 그 중 중요한 부분은 경제성장에 따른 그에 부응하는 군사력 건설이다.

또한 격동의 동북아시아 지역의 갈등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일본의 국방정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제2절 일본의 군사전략

일본의 군사전략은 1976년 10월 일본 각의에서 결의된 방위계획대강과 지난 일본 각의 결정으로 2014년부터 5년간 자위대 전력증강 개요를 나타낸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²⁶⁾을 발표함으로써 지난 4월에 협의된 미·일 방위협력의 지침(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의 새 가이드라인이 현재 일본 주변으로 한정돼 있는 미·일 동맹 행동반경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과 대중국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²⁷⁾

최초에 일본 군사전략은 전수방위전략을 중심으로 소련에 대항하는 수세적 방위전략을 추구하다,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전수방위에서 전진방위로 진일보하여 주변해역 및 해상 교통로 방위는 해양과 영공에서 함대 및 항공기를 사전 억제하는 개념의 뜻인 적극방위전략 또는 전진방위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²⁸⁾

25)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5년 동아시아 전략평가』, pp.121-125.

26) 각의 결정, 중기방위력정비계획(平成26年度~平成30年度), 2013년 12월 17일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chukf_seibi_26-30.pdf

27) 『연합뉴스』, (2015. 4. 28)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는 교훈

2015년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및 안전보장관련 법안이 참의회에서 가결되면서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활동반경이 확대되었다.

이는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하고 적극적 방위전략으로 본토의 위협뿐만 아니라 동맹의 위협,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일본의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4~2018년) 주요내용으로 기간내 부대의 신속성과 즉응성을 강조해 육상자위대의 육상총대, 기동사단, 기동여단을 창설하고, 처음으로 해병대 기능의 수륙기동단도 창설예정이다. 중국과 긴장이 높아지는 오키나와 지역에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새로운 부대를 배치하고, 신형 조기 경계기와 무인 정찰기도 도입해 경계 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상자위대의 신형 호위함, 이지스함, 잠수함 도입 및 미사일방어도 미국과 신형 SM-3 개발 생산을 계속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엇-III 미사일 성능을 향상시켜 타격능력을 보유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군사력 증강을 위해 새 중기 방위력 정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군사예산은 25조 엔을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액수는 지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11~2015)의 23조 4천900만 엔보다 1조 5천억 엔(약 15조 1천억 원)까지 증액된 액수이다.

기간부대의 개편과 관련해, 육상자위대를 전국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명령계통을 일원화해 ‘육상 총대’를 신설하고 이러한 편제의 변화에 따라 각종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개 사단 및 2개 여단을 높은 기동력과 경계 감시 능력을 갖춘 2개 기동사단과 2개 기동여단으로 개편하려 한다. 또한 도서 지역에 대한 침공을 받고 탈환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륙양용 작전 능력을 갖춘 ‘수륙기동단’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도서 방위는 평시 감시체계, 항공 및 해상 우세, 신속 전개, 지휘통제 분양에서 각각의 대책을 담고 있다. 평시 감시체계 향상을 위하여 오키나와에 육상자위대 연안감시 부대와 신형 조기정보기를 배치하고, E-2C 1개 비행대를 추가 배치, 이동식 경계관제 레이더의 전개 기반 조성 등을 5개년 계획에 담고 있다. 이러한 감시자산의 능력 확대를 통해 감시된 위협을 타격할 능력으로 항공자위대 나하기지의 1개 전투기 비행대를 2개 비행대로

28) 김강년. (2002)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p.137.

증설(F-35A 도입, F-15 개량) 및 패트리엇 미사일의 능력 향상(PAC-III MSE)을 통한 타격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상자위대는 각종 함정, 함재기의 수명연장 정비, 신형 호위함 도입, 함정 탑재용 다목적 헬리콥터 도입 등을 추진계획이다.

탄도미사일 방어로는 앞서 말한 대로 이지스함정과 패트리엇 미사일의 개량 이외에도 자동 경계관제 시스템의 능력향상과 고정식 관제레이더(EPS-7)를 도입하며,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SM-3 블록IIA의 생산 배치단계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는 것이다.²⁹⁾

<표 3-2> 중기 방위력정비 5개년 계획 기간(2014~2018) 도입 장비

구 분	종 류	도입규모
육상자위대	기동전투차량	99대
	장갑차	24대
	수륙양용장갑차	52대
	틸트로터 수송기 (-22)	17대
	수송 헬기 (CH-47JA)	6대
	지대함 유도탄	9개 중대
	중거리 지대공유도탄	5개 중대
	전차	44대
	화포 (박격포 제외)	31문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지스 호위함)	5척 (2척)
	잠수함	5척
	자위함 건조 계 (톤수)	15척 (약 5.2만 톤)
	고정익 초계기 (P-1)	23대
	초계 헬기 (SH-60K)	23대
	다목적 헬기 (함상용)	9대
항공자위대	신형 조기경보기	4대
	전투기 (F-35A)	28대
	전투기 (F-15) 개량	26대
	신형 공중급유기	3대
	수송기 (C-2)	10대
공 통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향상 (PAC-3 MSE)	2개군 및 교육소요
	체공형 무인기	3대

*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2014~2015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2015 : p.138.)

29) 한국국방연구원. (2015) 『2014~2015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p.137.

<표 3-1>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도입장비를 통해 일본의 군사전략이 추구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육상자위대의 수륙양용장갑차 도입을 통해 해병대 기능을 보유하겠다는 의도와 항공자위대의 스텔스기(F-35A) 도입,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호위함 증강,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작전 반경이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동북아일대로 확대됨과 동시에 탐지된 위협에 대해 타격할 수 있는 전력도 보유하게 되는 것이다. 즉 과거의 소극적 전수방위전략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방위전략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화부대 증강 및 이를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 수송함의 보유 또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로 확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4월 1일 아베 정부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각의에서 결정하고, 이어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을 발표한다. 40여 년 동안 지켜오던 자국에서 생산된 무기의 해외 수출을 자제하는 무기수출 3원칙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이다. 전체적 내용을 비교하면, 과거 무기수출 3원칙이 무기수출의 경우 전반적으로 금지한 가운데 일부를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이라면, 새로 제정된 장비이전 3원칙은 전반적으로 허용하는 가운데 일부만 금지하는 네가티브(Negative) 방식이다. 이것은 장비이전 3원칙이 무기수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새로운 무기수출 원칙의 제정을 통해 자위수준의 능력을 벗어나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추진한다는 의미로써 일본의 군사전략이 군사대국화로 발전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을 통해 일본의 방위산업은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해외 방위산업의 협력 대상 국가를 전통적인 미군만인 아니라 유럽 등 군사선진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중동 국가, 동남아 국가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특히, 대표적인 분쟁국가인 이스라엘도 방산 교역의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산업으로 주변국과의 긴장을 높이고 국제 무기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30) 한국국방연구원. (2015) 『2014~2015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p.139.

일본은 그동안 경제건설의 속도를 내고자 군사예산을 국내총생산(GDP) 1%로 제한해오고 있다. 이러한 내부적 기준은 고도 성장기에는 군사예산도 대폭 증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지난 10여 년부터 정체기로 접어들면서 군사예산에만 의지하던 방산업체는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

또 무기가 전반적으로 고성능화되는 추세도 일본 방산업계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수리비용이 높게 들어가는 고성능무기가 많아지면서, 수리비용이 신규 구매비용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2005년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 탄도미사일 방어 예산이 방위구매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해 전통적인 방위산업체는 상당수가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일본의 군사예산의 GDP 1% 내 억제 및 무기수출 3원칙 등에도 불구하고, 군사예산³¹⁾과 방산시장 규모면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으며, 세계 100대 방산 기업 순위와 숫자에서도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다.³²⁾

이것은 단지 규모 면에서 한국을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민간 기술을 바탕으로 일부 분야를 제외한 무기체계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우수한 기술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예산은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일 新방위협력지침 개정 및 참회의 안보법 가결 등의 이유와 2013년에 발표된 신방위계획대강에 제시된 통합기동방위력(統合機動防衛力)을 현재의 안보 환경에서 실효성을 충족하기 위해 자위대의 ‘활동량’ 증대뿐만 아니라 방위력의 ‘질’과 ‘양’을 정비하고 높이기 위해 방위예산은 증가할 것이고 방위산업 또한 더욱더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그림 3-1〉과 같이 방위성은 2015년 8월, 2016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시에 방위비를 5조엔 이상 반영해 달라는 예산요구서를 재무성에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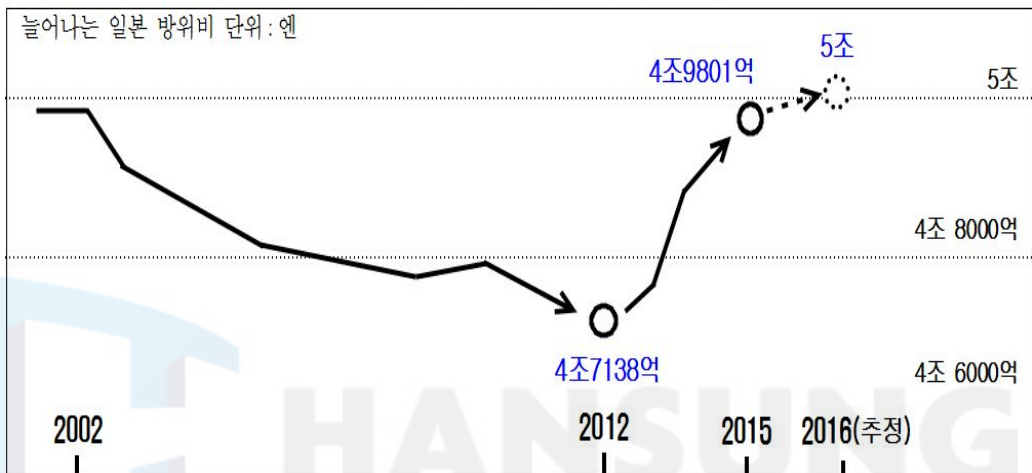
31) 2014년 국방예산, 한국: 35조 7천57억 원 / 일본: 4조 8,848억 엔(약 40조 8,000억 원)
「2014 방위백서」 자료편 참조

32) 2011년 기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23위), 가와사키 중공업(38위), 미쓰비시 전기(57위), NEC(58위), 후지쯔(98위) 한국: 삼성테크윈(53위), 한국항공우주산업(76위), 두산그룹(83위), LIG Nex1(85위),

출처: www.sipriyearbook.org/view/9708199678433/sipri-9780199678433-div1-27.xml

출하였다. 여기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법제 개편과 연관이 있다. 즉 중국의 움직임에 견제한다는 명분과 함께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과 관련된 법적 개정 및 방위비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1〉 일본의 방위비 추세



* 출처 : 중앙일보 오영환 “F-35·공중급유기.....아베, 중국과 군비경쟁”, (2015. 8. 3)

일본은 세계 3위의 경제 강국에 부흥하는 군사강국 건설이 군사전략의 핵심이다. 지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 군사력 확대에 제한을 받고 있는 일본은 군사조직도 정규군이 아닌 ‘자위대(自衛隊)’라는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 전력에 있어서는 이미 세계 10대 강국으로 꼽히고 있다.

일본은 섬나라라는 특성에 따라 원거리 작전을 겨냥해 해·공군 전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활동 영역확대를 위한 전력의 증가로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 문제와 한반도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적극적 공세적인 방위전략으로 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제3절 자위대 편성 및 현황

1. 자위대 능력

1990년대 이후 네 차례 발표된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제기된 주요 전력 증강사업의 우선순위를 보면, 2004년까지의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방공능력, 주변 해역 및 해상교통 안전 확보 능력, 육상 착·상륙 침공 대처능력 등의 전력을 우선적으로 증강하려 하였으나 2005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탄도미사일 공격, 게릴라 및 특작부대 침투, 도서지역 침략 등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1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는 조달 경비 총액도 23조 4,900억 엔으로 이전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 비해 7,500억 엔 정도 감소됨에 따라 육상자위대의 주력 장비인 전차, 화포 등을 축소하는 대신에 남서제도 위주로 해상·공중의 첨단전력을 증강하는 ‘동적방위력’을 추진하였다. 남서제도에 대한 전력증강은 육상자위대의 신규 부대 창설 및 배치, 오키나와에 F-15 전투기 부대증강, BMD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BMD 능력을 구비한 이지스함 추가 개조, PAC-III 미사일 부대 증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新방위대강에서 자위대가 구비해야 할 방위력의 성격을 종전의 ‘동적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으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는 더 이상 자위대를 수세적 방위가 아닌 공세적 방위로 전환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은 긴급사태를 억제·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총합적 방위체제’와 연계하여 육상·해상·항공 자위대 전력을 통합하여 기동성 있게 전개할 수 있는 방위력을 건설하는 개념으로 이에 맞추어 전력증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충분한 힘과 군사력을 보유하여 주변 위험요소들로부터 억제 전략을 구사한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동맹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서 전 세계적인 위협에 대비한 군사력 증강이라는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는 일본 본토의 위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미래적 위협에도 사전 대비하고 억제하는 자위대를 건설한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2. 육상자위대의 편성 및 체제

육상자위대는 2013년 말 현재 8개 보병사단, 6개 보병여단, 1개 기갑사단 및 중앙즉응집단으로 편성되어 있다. 중앙즉응집단은 테러와 재해 등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돌발사태 대비, PKO 활동, 국제긴급구조대에 선발대 파견 등의 임무를 위해 중앙즉응연대, 공정단, 특수작전군, 헬기단, 국제활동교육대로 편성되어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지역에 대한 공격을 비롯한 각종 사태에 즉시 대응하여 대처하기 위해 높은 기동력과 경계감시능력을 갖추고 기동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작전기본부대(기동사단, 기동여단 및 기갑사단)를 유지하는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수륙양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 기능을 갖춘 기동운용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전차 및 화포를 중심으로 부대의 편성·장비를 재검토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부대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육상자위대의 병력수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시에도 충분한 규모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13년 말 기준 약 15.9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³³⁾

<표 3-3> 新방위대강의 육상자위대 현황 및 전망

구 분		현재 상황 (2013년 말)	향후전망
편성정원		15만 9천 명	15만 9천 명
상비자위관 정원		15만 1천 명	15만 1천 명
즉응예비자위관 수		8천명	8천명
기간부대	기동 운용 부대	1개 기갑사단 중앙즉응부대	3개 기동사단 4개 기동여단 1개 기갑사단 1개 공수단 1개 수륙기동단 1개 헬리콥터단
	평시 지역배치 부대	8개 사단, 6개 여단	5개 사단, 2개 여단
	지대함 미사일 부대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5개 지대함 미사일 연대
	지대공 유도탄 부대	8개 방공포병(群)/연대	7개 방공포병(群)/연대

*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4 일본 방위백서』 신방위대강의 ‘별도 첨부표’

33) 국방정보본부. (2014) 『2014 일본 방위백서』 육상·해상·항공 자위대의 체제, p.241.

3. 해상자위대의 편성 및 체제

해상자위대는 자위함대와 5개 지방대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위함대는 호위함대, 잠수함대, 소해대군, 항공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전력은 이지스함 6척, 헬기탐재 호위함 2척을 포함하여 47척의 호위함(총 배수량 약 22만톤), 잠수함 16척, 고정익·회전익 항공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위함대는 4개의 호위대군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호위대군은 호위함 8척과 헬기 8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13,500톤 또는 19,500톤급 헬기탐재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5,000톤급 호위함 5척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잠수함대는 2개 잠수대군, 5개 잠수대로 편성되어 있고 2,450톤에서 2,900톤급의 잠수함 16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AIP(공기독립식축진체계)를 탑재한 2,900톤급 잠수함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 22척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이와 연계하여 잠수대를 5개에서 6개로 추가할 전망이다.

해상초계기는 P-3C와 신형 초계기 P-1 등 80여대를 운용하고 있어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광역, 정밀 대잠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주변 행역의 방위와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무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과 선체의 소형화를 병합시킨 새로운 호위함을 추가로 도입해 현재의 47척(12개 호위대) 체제에서 54척(14개 호위대) 체제로 증강된 호위함부대 및 함재회전익초계기부대를 유지하면서 이지스함 2척을 증강해 8척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수중 및 해상에서 정보수집·경계감시 작전을 평상시부터 수행하고 주변 해역에서의 초계활동과 방위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증강된 잠수함부대를 유지하며 고정익 초계기부대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해상자위대 능력은 수상함정과 총 톤수에서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이다. 중국 해군은 함정 수에서 해상자위대를 앞서지만 소형의 프리깃함 위주로 되어있어 방공능력은 일본보다 떨어진다. 러시아 해군은 항모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톤수에서 해상자위대를 앞서지만 방공능력이 떨어지며 양적 규모도 일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항모건조 등

원양에서 임무수행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해상자위대의 능력을 갖추는 이유로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도서 지역 위협에 대응하여 주변 해역의 방위와 해상교통로 확보, 국제평화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판단할 수 있다.³⁴⁾

<표 3-4> 新방위대강의 해상자위대 현황 및 전망

구 분		현재상황 (2013년 말)	향후전망
기간부대	호위함 부대	4개 호위대군 (8개 대) 5개 호위대	4개 호위대군 (8개 대) 6개 호위대
	잠수함 부대	5개 잠수함대	6개 잠수함대
	소해 부대	1개 소해대군	1개 소해대군
	초계기 부대	9개 항공대	9개 항공대
주요장비	호위함(이지스함)	47척 (6척)	54척 (8척)
	잠수함	16척	22척
	작전용 항공기	약 170기	약 170기

*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4 일본 방위백서』 신방위대강의 ‘별도 첨부표’

4. 항공자위대의 편성 및 체제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 항원지원집단, 항공교육집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총대는 13개 비행대와 4개 경계관제단(대), 5개의 방공포병군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전력으로 F-15를 보유하고 있어 대지공격 능력 보완 등 성능개량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전반경이 550마일에 달해 대만 해협 및 한반도, 중국의 상하이까지 공중급유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F-16을 모체로 하여 미·일 공동 개발한 F-2 전투기와 공중급유수송기(KC-767) 등도 보유하고 있다.

일본 주변의 모든 공역에서 상시 지속적인 경계감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항공경계관제부대를 운용하며, 경계관제업무를 방공지령소로 집약 시킴으로써 경계군(群)을 단계적으로 경계대(隊)로 축소하여 경계항공부대에

34) 국방정보본부, 전게서, pp.241-242. / 新방위대강(2013.12.17)

1개 비행대를 새롭게 편성 운용한다.

전투기부대의 경우 13개째 비행대를 새롭게 편성하고 항공정찰부대를 해체, 공중급유·수송부대에 1개 비행대를 새롭게 편성해 2개 비행대로 증강 편성하였다.

나아가 육상자위대의 지대공미사일부대와 협력하여 중요지역에서 방공작전을 수행하며, 이외에도 이지스함과 함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다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지대공미사일부대를 편성 운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항공자위대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 이은 세계 4위 수준으로 원거리 작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F-4 전투기 후속기로 F-35 스텔스 전투기로 전력화 할 예정이다.

특히 남서지역에서 중국 위협에 대응하여 항공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증강할 것으로 판단된다.³⁵⁾

<표 3-5> 新방위대강의 항공자위대 현황 및 전망

구 분		현재상황 (2013년 말)	향후전망
기간 부 대	항공경계관제부대	8개 경계군(群)	-
		20개 경계대(隊)	28개 경계대(隊)
		1개 경계항공대 (2개 비행대)	1개 경계항공대 (3개 비행대)
	전투기부대	12개 비행대	13개 비행대
	항공정찰부대	1개 비행대	해체
	공중급유·수송부대	1개 비행대	2개 비행대
	항공수송부대	3개 비행대	3개 비행대
	지대공 유도탄부대	6개 방공포병군(群)	6개 방공포병군(群)
주요 장 비	작전용 항공기 (전투기)	약 340대(약 260대)	약 360대(약 280대)

* 출처 : 국방정보본부 『2014 일본 방위백서』 신방위대강의 ‘별도 첨부표’

35) 국방정보본부, 전게서, pp.241-242. / 新방위대강(2013.12.17)

제4절 일본 자위대 군사력 증강에 따른 평가와 전망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미사일 발사행위와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의 위협을 주요 안보문제로 인식하여 방위력 개념을 ‘동적 방위력’에서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지역 방위를 담당하는 해병대 기능을 수행하는 수륙기동단 창설, 육상자위대에 남서제도의 연안감시부대와 초동임무를 담당하는 부대 신편, 오키나와의 전투비행대를 현재의 1개에서 2개로 증강 외에, 호위함 및 잠수함 전력 증강,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첨단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BMD 능력을 보유한 이지스함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지대공 패트리엇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정찰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찰위성과 조기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급유기의 도입으로 전투기의 작전반경이 확대되었고 아울러 현재 보유 중인 F-4 전투기의 후속기로 F-35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일본은 이른바 ‘보통국가’로서의 군사적 위상 정립을 위해 전략무기 도입, 우주감시·정찰능력 강화, 원거리 투사전력 보유 등 독자적 작전능력 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첨단장비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양자 및 다자간 안전보장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일 안전보장체제를 기축으로 동맹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및 호주와는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ASEAN 국가와의 안보협력과 해상교통 안전확보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인도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안전보장 회담·교류를 통한 신뢰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자위대 해외파견을 통해 아이티, 네팔, 수단, 골란고원, 동티모르, 남수단 등의 지역에서 UN 평화유지활동, 인도네시아 지진과 파키스탄 홍수지역에 의료지원과 수송활동 등 적극적으로 국제평화 협력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자위대 해외파견을 법적·구조적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법률안인 안보법 개정이 참의원 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미·일 동맹관계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었고 이러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형적으로 볼 때 해군력과 공군력을 최첨단 전력으로 증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로 일본은 섬나라이며 무역 국가이기에 해군력의 증강은 일본에게 있어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임무는 미 제7함대라는 압도적 존재의 맥락 속에서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일본은 해로의 방어를 미국에 맡겨 왔지만 해상자위대는 신속하게 보다 자립적이고 자족적인 부대로 전환할 수 있는 해로안전작전을 수행할 핵심적 기술능력을 개발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호위부대와 항공부대 및 잠수함부대로 조직되어 있는데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결코 작은 해군은 아니다. 그렇다고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곳 까지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대양해군(Blue Water Navy)도 아니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신이 이지스함 및 신형호위함 등을 전력화하고 있다.³⁶⁾

또한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경보체제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북 미사일 발사 실험시 동북아지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가 일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받기 위해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유일한 원폭피해국이 일본이다. 이러한 상황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및 핵실험은 일본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방공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최첨단 전력으로 발전하고 탐지한 위협에 대해 타격능력을 보유하기 위한 항공자산의 필요는 절대적인 것이다.

앞으로 일본의 ‘자위대(自衛隊)’는 사전적 의미에서 보다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협에 대해서까지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36) 강성학. (2014) 『전쟁의 신과 군사전략』 p.323. 제6장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 증강과 동북아 지역안정

IV. 대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군사전략 방향

제1절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 인식

동북아 지역에서는 경제 분야 협력과 상호 의존성의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즉 동북아 지역은 세계 2·3위의 경제강국이 있고, 한·중·일 세 나라의 경제규모가 세계 총생산의 약 23%에 달하는 등 세계경제의 중심지역으로 커지고 있다.³⁷⁾ 지역내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깊어지고 지역 경제 통합 방향도 추진되는 등 경제 협력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인식과 영토·영유권 문제, 북한의 위협 등 다양한 갈등 요인으로 안보의 위협은 증가하고 있으나 안보협력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상호 견제와 충돌이 증가하고 있다.

동북아는 당분간 미·중관계가 지역 안보체계의 핵심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중국의 변화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추진으로 향후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경쟁이 동북아 지역 안보체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미·중 관계는 일반적으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표를 공감하면서 큰 틀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국가이익이 연관된 경우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양극구도가 계속되고 러시아와 일본 역시 국익과 영향력 확대 경쟁에 뛰어들면서 동북아의 불안적 요소에 의한 갈등심화는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주변국들은 군사력 확대, 협력 및 동맹관계 강화, 다자협의체 주도권 확보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 지역 국가간의 군비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력으로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해·공군력 중심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특히 우주공간을 둘러싸고 지역 국가들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반

37) 국방부, 『2104 국방백서』 pp.13. 1.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도 주변 4국의 군사력은 각 국가의 입장에서 지리적 및 현실시적 위협에 대해 군사력을 증가하고 군사전략을 발전하고 있으며 동북아 4국의 군사력 개관을 보면 <표 4-1> 와 같다.

<표 4-1> 동북아 주변 4국의 군사력³⁸⁾

구 분	병력 (명)	주요무기	국방비 (달러)	전력 증강
미 국	149만 2천	항공모함 10 잠수함 72 전투(폭)기 2,224	6,004억	아태지역에 해·공군 전력 60% 배치 추진, 역내 MD체계 강화
일 본	24만 7천	이지스함 6 잠수함 18 전투기 340	510억	F-35, 조기경보기, 채공형 무인기 도입 이지스함 추가 도입 및 신형 호위함 개발 등
중 국	223만 3천	항공모함 1 잠수함 70 전투(폭)기 1,859	1,122억	신형 전략미사일, 공격핵잠수함, 항공모함, 우주전력 강화
러시아	84만 5천	항공모함 1 잠수함 64 전투(폭)기 1,320	682억	핵전력 증강, 스텔스 전투기 개발, 신형 미사일 개발, 북극해 및 우주전략 강화 등

* 출처: 김두승 외,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2015: pp.121-139)

미국은 국방예산 감축과정에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상군을 중심으로 군 규모를 축소하고 원거리 전력투입 능력을 중요시 하면서 아·태지역 전력은 증강시키며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2014년 3월에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와 방대한 국방예산 감축 상황을 고려하여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방전략의 핵심원천으로 미 본토 방어, 전 지구적 안보 구축, 전력 투사 및 결정적 승리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A2/AD)’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38)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14. 2, 일본 방위백서(2014)등 관련자료 종합(국방비는 2013년 기준)

위해 ‘공해전투(AIR-Sea Battle)’와 같은 새로운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아·태 지역에 해·공군 전력을 지속적인 증강에 힘쓰고 있다.

육군은 세계 어떤 상황 및 여건에서도 작전이 가능하도록 군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 정규군은 전시 최대 규모 57만 명에서 44~45만 명으로 감축될 예정이며 대신 특수전 부대는 증강할 계획이다.³⁹⁾

해군은 변화하고 있는 미래전략 환경에 부합되는 해군전력으로 지속적인 건설에 힘쓰고 있다. 2020년까지 함정 보유량을 꾸준히 늘려 최대 6척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함정의 60%를 아·태지역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작전 수행하는 함정을 2014년 51척에서 2015년 58척, 2020년 67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18만 2천 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공군은 차세대전투기·공중급유기·수송기와 장거리 스텔스기를 획득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날카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항공전자 기술, 무장탐재, 전술 및 훈련 부분도 발전 시켜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 동맹 국가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일본과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추진하였고, 한국과도 연합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방면에서 동맹협력을 증대해 나가고 있다. 호주 다윈에 해병대를 순환 배치하였고, 2014년 4월에는 필리핀과 현지 군사기지와 시설에 대한 미군의 접근권 및 사용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위협력확대협정”을 체결하였다. 싱가포르에도 연안 전투함을 최대 4척까지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⁴⁰⁾

일본은 2013년 12월 외교·안보 분야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발족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도 수립하여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하는 전략지침과 ‘적극적 평화주의’를 제시하였다. 2014년 7월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였으며, 무력공격이 아닌 도서 침해 상황에 자위대를 투입하고 국제평화활동에 기여하기 위해 자위대의 후방지원 활동과 무기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를 결정하여 시행하였다.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고, 안보법 개정안을 본의회에서 통과 시켰다.

일본은 2013년 12월에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발표하고 ‘통합기

39) 국방부, 전계서, p.15.

40) 상계서, pp.13-15.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 발췌

동방위력' 개념을 제시하였다. '통합기동방위력'은 중국의 군사 대국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주요 위협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 열도 남부 도서 지역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전력을 증강시키고 있다. 미·일 동맹은 물론 한국, 호주, 인도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육상자위대는 도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 센칸쿠 열도 인근 도서에 '연안감시대'를 배치하고 수륙양용작전을 전담하는 '수륙기동단'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작전 기본 부대인 사·여단을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 위해 '유상총대'를 창설하고, 도서 지역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사·여단의 일부를 '기계화 부대'로 개편하기 위한 준비를 시행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19,500톤 '이즈모'급 호위함을 포함하여 호위함을 총 54척, 잠수함을 총 22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탄도미사일 방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6척인 이지스함을 8척으로 증강할 예정이며, 수륙양용작전을 지휘통제하고 병력과 물자를 전개 및 수송하기 위해 호위함과 수송함도 개량하고 있다.

항공자위대는 2014년 4월 도서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추가적으로 창설하였다. 공중우세 달성을 위해 오키나와에 F-15 전투기 비행대를 추가 창설하고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수직이착륙기, 신형 공중 급유기, 수송기 등을 전력화할 예정이다.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소말리아 해역의 CTF-151 연합해군부대에 최초로 자위대 호위함을 파견하였다. 2013년 11월 필리핀 태풍 피해 복구 지원과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실종항공기 수색작전에도 자위대를 파견하는 등 국제긴급구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무기와 군사장비의 수출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4월에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 시행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방산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국제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가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국제 방산협력을 강화하고 있다.⁴¹⁾

중국은 2013년 11월에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안보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2014년 1월에 공식 출범시켰다.

41) 국방부, 전계서, pp.15-17.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일본) 발췌

중국은 2013년 국방백성에서 국방정책의 목표와 임무를 국가 주권·안보 및 영토 수호, 국가의 평화로운 발전 보장, 세계 평화와 지역 안정 유지라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적극방어전략을 기반으로 ‘정보화 조건 하 국지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 핵·미사일과 해·공군 전력의 첨단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중국군 체제 및 편제를 조정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개혁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육군은 기동작전과 입체적인 공격·방어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육군 항공병과, 기계화 및 특수작전부대를 발전시키면서 공지일체(空地一體), 원거리 기동 및 신속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육군 항공 2개 연대와 특수전 2개 부대를 증설하였으며, 기갑 기계화 부대를 사단급에서 여단급으로 재편하고 있다.

해군은 원거리 작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3년에 구축함 2척을 포함하여 총 18척의 시형 수상전투함이 취역하였다. 사거리 8,000km 이상인 JL-2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신형 전략핵잠수함(Jin급, 094형) 1척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4척을 운용 중이다. 2013년 2월에는 ‘랴오닝’ 항공모함을 칭다오 군항에 배치하여 전력화하기 위한 연례적 훈련을 지속하고 있다. 같은 해 5월에 해군 최초로 항공모함 함재기 부대를 창설하여 항공모함 조종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공군은 ‘공격과 방어 겸비’ 전략에 의해 신형 전투기, 지대공미사일 및 레이더 등 첨단 무기들을 발전시키고 있다. 2011년 1월에 J-20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에 처음 성공한 이래 2012년 10월에 경형 스텔스 전투기인 J-31의 최초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등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Y-20 군용 대형 수송기의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며, 신형 H-6K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전력화하는 등 공군을 첨단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2포병은 핵 및 재래식 탄도 미사일을 통제하면서 전략적 위협과 핵반격, 재래식 미사일의 정밀타격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DF-41 전략미사일과 JL-2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2013년 12월에는 탐사위성 ‘창어-3호’를 발사하는데 성공하였고 달 표면 연착륙에도 성공하는 등 우주 강국 건설을 추구하고 있다.⁴²⁾

러시아는 ‘국가안보전략 2020’과 ‘군사독트린’에 따라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 주

42) 국방부, 전제서, pp.17-18.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중국) 발췌

권을 수호하고 국익을 추구하는 ‘적극방어’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강한 러시아 건설’을 가치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 12월에는 국방개혁 1단계로 ‘군 구조 및 정원 개편’을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 2단계 ‘군 복지 문제 해결’도 완료하였다. 2014년부터 핵 억제력을 유지하면서 저장도 분쟁에 대비한 신속대응군 창설과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총 7,585억 달러 규모의 ‘2020년 국가무기체계 획득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육군은 현대전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휘체계를 간소화하고 여단 중심의 상비군 체제로 전환하여 상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분쟁 지역에 신속히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모체로 ‘신속대응군’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차세대 신형전차(ARAMAT, T-99), 대공미사일(BUK-M3), 지대공 미사일(TOR) 시스템 등 국지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첨단 전력도 보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군관구 지상군도 장비를 현대화하고 보다 기동성 있는 군으로 재편하고 있다.

해군은 지도부의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 2013년에 19,400톤 보레이급 전략핵잠수함 2척을 건조하여 태평양함대에 1척을 배치하였다. 잠수함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보레이급 신형 전략핵잠수함을 운용하기 위해 캄차카반도에 잠수함 기지도 건설하고 있다.

공군은 정밀타격 및 방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원거리 작전 및 정밀타격 능력이 향상된 5세대 전투기(T-50, PAK-FA)를 개발하여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할 예정이다. 핵과 재래식 무기 모두 탑재가 가능하고 장거리 투사 능력이 강화된 5세대 전략폭격기를 구비하기 위해 전략폭격기(Tu-95)와 4세대 초음속 전략폭격기(Tu-160)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2014년 2월에는 국지적 대공 우세권 확보를 위해 최신예 전투기 S-35s 12대를 극동지역으로 배치하였으며, 향후 대공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400km의 지대공미사일 S-400을 배치할 예정이다.

북극 부대를 통합 지휘하고 북극해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에 ‘북극통합전략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우주공간에서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 우주 기술 및 능력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현재 인공위성 100여 기를 배치하여 정보 수집, 통신 및 항법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전략미사일 방어와 위성방어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화된 조기경보, 지휘통제 및 요격체계로 구성된 항공우주방어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⁴³⁾

제2절 한반도와 일본과의 관계 고찰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를 고찰한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일본은 고대부터 밀접한 연관성을 맺어온 나라이다. 삼국 시대부터 중국을 통해 한문화와 불교문화를 수입하여 국가 통치의 정신적 기초를 이루었으며, 많은 문화·경제적 교류가 일본과 이루어졌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나라로 국민들에게는 거부감이 있다. 또한 현재에도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적 문제를 쟁점으로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지리적으로는 가장 가까운 나라이면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먼 나라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국제관계에서는 자국의 이해득실을 위해 국가별 세력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미-일 관계, 한-미 관계, 미-중 관계, 북-중 관계, 한-러 관계, 미-러 관계 등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4대 강국과 다자간의 관계가 상호 대립, 협력을 통해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국제적인 안보환경 분야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 관계가 확대 및 심화되어 단일 국가 및 단일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 및 안보 문제가 즉시 국제사회 전체로 확대될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일본과 한반도는 매우 가깝기 때문에 주변국과 복잡한 관계가 형성되어 한반도 또는 일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상호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일본과 한반도 주변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는 안보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비전통적인 안보분야를 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인 협력과 연대가 진전되고 있다. 한편 영토, 주권 및 해양에서 경제권익 등을 둘러싼 회색지대사태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보이고 있으며 해당 사태들이 보다 중대한 사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일본과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북한은 군사를 중시하는 선군정치체제를 기반으로 대규모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파괴무기 및 운반수단 이용 가능한

43) 국방부, 전계서, pp.18-19. 제2절 동북아 안보정세(러시아) 발췌

탄도미사일의 개발·배치·확산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보유하는 등 비대칭 군사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도발행위와 일본을 포함한 관련국에 도발적 언동 등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에 대한 미사일 공격 시사 등 도발적 언동과 더불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면서 급박한 위협이 되고 있다.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과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한반도는 장대한 해안선과 일본 본토에서 떨어진 다수의 도서부 및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 국가이며 대량의 자원 및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 있어 법의 지배, 항해의 자유 등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한 ‘개방되고 안정된 해양’의 질서를 유지하고 해상교통 및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평화와 번영의 기초이다. 일본은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도시 지역에 산업·인구·정보기반이 집중되어 있으며 연안부에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이 다수 위하는 등 안보상 취약성이 존재하고 있다.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극히 심대한 피해가 발생해 이러한 영향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까지 파급될 것이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이다.

이처럼 일본과 한반도의 관계는 지형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협력과 대립은 지속될 것이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간의 여론적 극에 달한 분위기 속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적 감정 또한 일본과의 마찰요인으로 들 수 있다.

역사적 왜곡된 문제점과 중국, 한국과의 영토문제 등을 고려 현재 일본의 군사대국화 바람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고,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곳이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본과 한반도와의 지리적, 역사적 시점에서 바라본다면 그리 좋은 전망은 아니다.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통하여 국제적 관계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절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앞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자위대의 활동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전 세계로 군사전략을 펼쳐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자위대는 일본 본토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조직이 아닌 작지만 강한 군대로 급부상하였고, 활동범위를 확대하려는 법안도 강행하면서 통과 시켰다.

향후 일본자위대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과 안보협력 강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편제를 조정하고 신형장비와 군사전력을 증강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한국이 대응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미래지향적 자주국방 역량 강화

현재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주변국가와 이해의 득실에 따른 상호협력 및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군비경쟁이 치열해 지는 이유는 군사력 증강에 따른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우선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 구조개혁을 통하여 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정보화·첨단화 네트워크 중심 환경에서 공세적 통합작전이 수행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⁴⁴⁾

그러기 위해서는 ‘병력위주의 양적 군 구조’에서 ‘정보·지식중심의 질적 군 구조’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인구조사에 따르면 병역자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비하여 간부를 증원하는 등 정예화된 병력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실전적 위주의 교육훈련과 효과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전투력을 할당하고, 전시 동원능력 개선과 예비전력 정예화, 군수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군수운영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병력 구조면에서 현재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육군은 현재

44) 국방부, 전계서, pp.78. 제1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고, 해·공군의 병력은 부대내 개편을 통해 감축하면서 병력감축 손실에 따른 전투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비증강을 도모하여 전투장비의 최첨단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3면이 바다인 한반도는 향후 해군력과 공군력의 중요성이 절실하다. 일본 자위대 역시 이러한 지리적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해·공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은 수상·수중·공중 입체전력 통합운용능력을 확보하여 현존 위협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및 해양자원 보호 등 전 방위 국가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동북아 주변 국가들의 해군력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잠수함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기존 이지스함 및 호위함을 증강하기에는 군사자원 면에서 현실성을 고려 장기적인 준비를 통해 기동함대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군은 현재의 위협 및 미래 잠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데 핵심을 두고 개편해야 한다. 한반도와 주변지역을 감시하고 제대별 전장을 가시화하기 위해 감시·정찰전력을 보강해야 하며,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휘결심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 C4I체계 등 지휘통제 시스템을 전력화하여야 한다.

공중전력은 공중우세 및 중심 전략목표에 대한 장거리 정밀타격능력 확보를 위해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잠재적인 주변강국의 항공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탐지, 식별, 결심, 타격 능력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아울러 통일 대비 잠재위협에도 대비 가능한 질적 수준을 달성하는 것도 목표로 하는 바, 감시권(2,000km) 및 장거리 정밀 타격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실시간 감시 및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지·해상 광역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데 도서 및 영해 초계를 위한 무인항공기전력 확보가 요구된다. 해상 조기경보체계 구축을 위해 P-3C 추가 확보 및 해저 음탐 장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전장환경을 고려할 때 수입 및 기술

도입에 의한 첨단무기 전력화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산 무기체계의 개발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미사일, 항공기, 헬기, 전차 등의 창조적인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국방과학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내 연구개발 우선 정책과 ‘선 체계개발, 후 기술개발의 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이 선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무기체계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 핵심부품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안정적인 종합군수지원을 위한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확대하고, 국방 무인·로봇 분야 등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과 미래전을 주도할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창의·도전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러한 창조적 국방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군 기술협력강화를 활성화하여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함고 동시에 우수한 민간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공동 기술개발을 확대하여 선진국의 기술 도입, 기술 수출, 공동개발 등의 형태를 통해서 국제협력을 확대하여야 한다.⁴⁵⁾

2.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

한·미동맹은 6.25전쟁 속에서 태동하였다. 1953년 10월에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은 끊임없는 북한의 위협과 도발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는 굳건한 초석이자 원동력이었다.

최근 미·일 동맹을 보면 향후 미국이 일본 군사력을 증강하여 동북아 지역에 대한 방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인 부분만 바라보고 미국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지난 한·미동맹의 60년을 평가하고 향후 60년을 조망하기 위해 한·미 상호 이해 증진의 노력이 필요하며 양국 정부와 군, 국민들 간 신뢰와

45) 국방부, 전게서, pp.78-88. 제5절 국방개혁 보완 및 발전,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 증강 발췌

유대감을 형성하여 한층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이 동북아지역에서 전개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한국이 가지는 전략적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화해 나가는 한·미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한·미간의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도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핵우산, 재래식 타격,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위의 군사능력을 활용하여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 전략을 보다 구체화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비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을 발전시켜 2013년 10월에 서명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하여 연합 작전계획을 보완하며, 분야별 다양한 협의과제를 통해 동맹 현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야겠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에게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가장 우선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가 없이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대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의 군사력과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보면 현존하는 최우선 위협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극복하고 장기적인 군사전략으로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여야 한다.⁴⁶⁾

3. 한반도 주변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

지역 내 국가들 간 국방협력 증진을 통해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다자안보협력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관련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의 안보 관심사이며 국제적으로 협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부터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46) 국방부, 전제서, pp.106-109. 제2절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발취

특히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테러, 해적, 대규모 자연재해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을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 국가들을 중심으로 동맹 및 상호관계에 치중해왔던 국방협력 체계는 포괄적인 다자안보협력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다. 다자안보협력활동에 우선적으로 참가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관련국들과 공감하고 향후 우리의 안보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한반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군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성숙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부응하도록 국방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⁴⁷⁾

47) 국방부, 전제서, pp.127-129. 제3절 다자안보협력 발취

V. 결 론

오늘날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에는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제약요소가 많이 있기에 몇 가지 특징을 고려해야만 한다.

첫 번째 특징으로 볼 때, 군사 및 정치요소의 조화, 즉 통합적인 전략적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군인과 정치인의 공동작품이 요구된다.

특히 군대의 역할이 보다 광범해지고 정치적인 성격을 가짐에 따라 독자적인 임무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으며, 군대가 사회체제에서 지니고 있던 독립적 지위도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군사전략의 실질적인 수립과 집행은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 정책결정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전략의 복잡성 증대를 들 수 있다. 전략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양태가 주어진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전문가에 의해 운용되며, 주어진 시간과 공간 내에서 인적요소와 물자, 그리고 적대세력간의 상호관계를 조직하고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한 절차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다. 사실상 전략의 기본요소는 수천 년 간 변화되지 아니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의 수준과 적용범위가 변천하고 전략 절차상의 제 요인 즉, 주변상황, 자원의 방대함, 전쟁수행방식, 전력구조 및 태세 등의 요소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전략의 복잡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으로서 전략수립은 국가이익으로부터 출발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의 수립 절차는 일반적인 결정행동절차의 한 형태에 불과하지만, 전략의 수립절차는 일국의 이해가 크게 걸려 있는 위기상황이나 전쟁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략의 수립절차는 국가이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분쟁발생 가능성이 클 때,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평시보다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요구될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전략의 수립절차는 국가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의 수립으로 시작된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전략기능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전략적 절차는 군사전문가에게 위임되고 전략의 목표는 내각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통례였다. 그리고 내각은 전문적인 전략적 제안을 평가하고 보완하며 다른 정책과 조정되며, 전략시행기간 중 간섭과 통제활동을 전개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전략적 사고 및 조치는 오직 특정한 상황 하에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실시되도록 고려되고 분업화된 전문집단의 기능이었다.

전략 외의 모든 활동은 정책 또는 정치로서 내각의 고유한 기능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정책과 전략이 별개의 기능으로 유지된다 할지라도 전략수립절차의 초기단계에서만 차이가 날 뿐, 전략이 시행될 때에는 실제로 이 두 가지 기능 사이에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형성된다. 내각은 전략적 조치를 통제함으로써 개입하는 한편, 군대는 전문화된 기능적 자율성을 적절히 유지하면서도 상호적인 접근을 증대시켜야 한다. 장기적인 조치에 따른 전략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문제는 조정이 불가피하다. 또한 갈등과 분쟁이 시·공간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최선의 계획과 의도라도 점차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인 것과 군사적인 것은 상호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전략적인 사고 및 조치절차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려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략수립절차가 항상 구체적인 현실과 밀착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전략절차가 점차 가상적인 상황, 즉 시나리오, 전쟁연습 또는 다양한 전략연구를 바탕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전략적 사고는 추상적 개념화되고 있으며, 실제 상황을 취급하는데 필요한 활성화된 분석과 계산의 완전성이 결여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연습에서 전략수립절차의 장치를 실제로 적용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연습은 실제적인 전략과는 거의 공통점이 없게 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추상적인 연습은 전례를 따르게 되는 하나의 개념적인 타성화의 습성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상황에서의 전략의 수립과 집행 등의 전략절차는 수평적·수직적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래에는 전략이 정책기능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군사적 기능이었고 전략적 사고의 영역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전략은 정책결정과 군사적 사고가 결합된 기능이며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의 확대된 군사전략의 개념에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이익 추구와 처한 안보환경들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군사전략을 수립하는데 본 연구는 안보환경, 지리적 환경,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방위정책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대일관계를 면에서 한국의 군사전략을 분석하여 얻은 미래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지향적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국방력을 우선 강구하고, 동북아 국제관계속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비하는 방위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외세의 침입과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군사력 건설과 경제발전이 필요하다. 일본, 중국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은 점차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국제적 입지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이 증가되고 있다. 다른 면에서 군비경쟁이 심각해지고 평화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스스로 길러야 한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총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였고, 이에 조선은 칼과 활로 대응하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은 서구문명을 통해 현대화 된 군대를 조직하였다. 이처럼 국가별 군사력의 차이는 약육강식의 냉정한 현실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군사력 증강은 군사전략의 3요소인 군사자원 측면에서 미군이나 중국, 일본과 같은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는 데는 제한이 있으나 상대국의 전력에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 필요는 있다. 그 예로 일본의 해군력은 규모는 작지만 세계 3위의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해상자위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저지하고 제압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증강하여 재해권에 대한 주도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본 항공자위대는 2016년에 F-35A(스텔스기)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에도 F-15, F-2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공시스템 탐지레이더 및 대공미사일 등의 대공방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억제할 수 있다.

둘째,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을 통해 확고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미 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앞으로는 상호 이해와 신뢰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동맹을 점진하여야 한다. 미국과 안보 공조체계를 더욱 더 발전시키는 것이 자주국방 및 경제발전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직접적인 위협에 대비하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또한 한·미관계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저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주변 열강에 대한 다자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지역내 불안정과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 한반도 주변 열강 한·중·러·미 4개국이 참가하는 다자주의적 협력체를 구성하여 정보공유와 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대립보다는 협력을 실천해야 한다.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이다. 이러한 일제 강점기가 가장 먼저 시작된 곳이 한반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임진왜란 당시 징비록에도 한반도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수 있다.

일본을 “가깝지만 먼 나라”라고 표현한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최기에 위치한 나라이지만, 역사적 문제를 통해 민족 정서적인 면에서 거리감이 있는 나라이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으로 대립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1945년 7월 패전한 일본은 헌법에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라고 명기한 이후 7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방위정책 재·개정을 통해 경찰예비대, 자위대 편성,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 개념으로 전환, UN평화유지활동군(PKO) 협력법 제정 등 단순한 자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역 방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력수단의 증강이 지속되었다.

2014년 방위백서에 ‘통합기동방위력 구축’이라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주요 위협요소로 상정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2015년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내용의 안보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동북아의 국제정세, 안보환경 변화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사력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위대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즉 일본자위대는 이름만 자위대 일뿐 일본의 정규군이며 활동영역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또한 일본은 지리적으로 섬나라이며 자원의 부족으로 자원의 수입에 의존하며, 자연재해가 많은 열도국가이다. 그러기에 영토분쟁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다.

6.25전쟁으로 급속하게 공업기술이 발달한 일본은 방산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심도 깊게 인식하게 되었으며, 현재 군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를 깨달았다. 또한 현존하고 공개된 자료에 한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여 각 국가별 전략적으로 기밀에 준하는 군사력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강한 자위대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증강의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고 지리적, 역사적,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 일본 군사력 증강에 따른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인식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그 대응책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1) 단행본

- 강성학. (2012). 『전쟁의 신(神)과 군사전략』 p.323.
- 김강년. (2002).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p.137
- 김두승 외. (2015). 『2015 동아시아 전략평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성철. (2015). 『일본외교와 동아시아 국제관계』 . 한울 아카데미
- 고영자. (2011). 『6.25전쟁과 일본의 한반도 전략(6.25전쟁과 일본의 고도성장 군사대국화)』 . 탕자출판사
- 국방대학교. (1984). 『군사전략 I』 pp.83-84
- 국방부. (2014). 『2014 국방백서』 pp.15-129.
- 국방정보본부. (2014). 『2014 일본 방위백서』
- 다나카 아키히코, 이원덕. (2003)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pp.71-254
- 류제승. (1998). 『전쟁론』 p33.
- 박경현. (2004). 『현대군사전략 개론』 합동참모대학. pp.22-111.
- 박영준. (2008). 『미·일·중·러의 군사전략』 p.126.
- 박영준. (2008). 『제3의 일본』 한울. pp.211-222.
- 박창희. (2013). 『군사전략론』 플레닛미디어
- 박휘락. (2005). 『전쟁, 전략, 군사 입문』 법문사. p.99
- 백지옥. (2015). 『통합기동방위 실현 방위예산의 무게 중심』 국방일보
- 송화섭 외. (2015). 『2014~2015 동북아 군사력과 전략동향』 한국국방연구원
pp.137-139
- 순주영. (1996). 『강좌 전략론Ⅲ: 전쟁론』 . 해군사관학교. p.159
- 임경환. (2015). 『21세기 동북아 해양전략 경쟁과 협력의 딜레마』 북코리아
- 이승철. (2004). 『21세기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 . pp.5-6.
- 윤영호. (1994). 『전략론: 이론과 실체』 . 한원. pp.10-19
- 최병갑 외. (1988). 『군사전략 대강 I』

1) 논문 및 간행물

- 김홍원. (2003). “통일 한국의 군사전략과 기동전”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인모. (2012). “일본 방위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 영향요인 분석” 軍事評論 제419호 投稿論文
- 임종석. (201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우혁. (2006). “자위대의 대외활동 강화가 우리 군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건삼. (2006). “한국의 군사전략 발전방향”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국방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춘근. (2014). “격동의 동북아시아와 대한민국” 강의자료
- 오영환. (2015). “F-35·공중급유기...아베, 중국과 군비경쟁”, 중앙일보 사설
- 연합뉴스. (2015).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는 교훈” 사설
- 조양현. (2015). “일본 집단자위권과 동북아 정세” 미국의 목인 아래 ‘군사대국화’ 추진 다자협력체제로 지역 안보 이끌어야/ 통일시대 제107호, p26~29

2. 국외문헌

- 각의 결정, 중기방위력정비계획(平成26年度~平成30年度), 2013년 12월 17일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pdf/chukf_seibi_26-30.pdf)
- Y. Harkabi, Nuclear War And Nuclear Peace
(Jerusalem : Israel Program for Scinentific Translation, 1966), p.1

ABSTRACT

A Study on the ROK Military Strategy in Accordance to the Augmentation of Japanese Self-Defense Forces : Centered around the military strategy on the role and expansion on the range of activity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regarding the reformation on the Japanese National Security law

Suk-Bong, Song

Major in Military Strategy

Dept.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Graduate School of National Defense Science

Hansung University

Japan has recently amended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 in the Upper House session which enabled a National Security law reformation called 'Practicing Collective Self-Defense.' This policy is essential in augmenting their defense strength and expanding their range of activity.

After the signing of the 1951 US-Japan Security Treaty, Japan has pursued a passive stance in relying solely on the US for their national defense. In the late 1970's as threat of the USSR escalated, Japan has reinforced the 1978 Guideline in order to supplement the imperfect military aspects of the US-Japan Alliance. After the Cold War has ended, the focus of the US and Japan shifted from security to the economy in which conflicts arose among them. However efforts in strengthening the alliance by intellectuals and political leaders have led to the powerful

relations among the US–Japan Alliance.

Especially, after the Abe administration the original passive and restraining national security stance which was US–leading Japan–supporting has changed to an active and aggressive stance which led to the militaristic augmentation and expansion in the operation range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the Japanese Defense white book and amends in unit organization and weapon system augmentation mentioned in the 2014 defense plan principles, the direction as to military augmentation and expansion on operation range has been stated.

In accordance to such, the Republic of Korea's military strategy development direction and response is as follows.

Firstly, the ROK must strengthen future–oriented autonomous defense capacities. Securing the capacity in preparation for the North Korea threats and securing responsive capacity against the Japanese Self–Defense Air Force and Naval Forces must be done. In the aspect of military resources, one of the components of military strategy, it is realistically limited to match the military strength of the economy powerhouse, Japan; thus securing asymmetrical strength against the Japanese Naval and Air Forces must be done.

Secondly, maintaining the ROK–US Combined Defense Readiness through firm future–oriented ROK–US Alliance is important. For the past 60 year, the ROK–US relations have played a crucial role for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East Asian region, and it is important to prepare for existing threats and counteract upon the Japanese influence and military power augmentation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which will gradually improve the alliance.

Thirdly, it is important to minimize regional instability and conflict through constructing multiparty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s regarding powerhous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2015 i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Independence which means it has been 70 year since the defeat of Japan. In 1945, Japan clarified in their constitution that they will not own a standing army. However the military power that Japan currently possess is not the minimum for national defense. They have up-to-date equipment and weapons systems which gave them the name 'Small, but strong military', and are augmenting military strength and expanding the range of activity through continuous defense policy amendment and reforms. Especially in 2015, by amending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 in the Upper House session which enabled a National Security law reformation called Practicing Collective Self-Defense, the operational range has spread worldwide and military augmentation for military strength matching these standards will rapidly take place. In geological, historical and ethnic aspects,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subject to heavy influence of the military augmentation and expansion in activity range by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response and to develop military strategy to restrain, the ROK must devise proper measures in responding to potential threats and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around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trengthening future-oriented autonomous defense capacities, maintaining combined defense readiness by enlarging ROK-US mutual understanding and trust and multiparty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s with the powerhouse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combined readiness, multiparty 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3 components of military strategy, US-Japan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